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2018년 1월 23일(화) 10:00 이후 사용

총 8쪽(붙임 별도)

담당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한순기, 사무관 김성일 (02-2100-3203, 320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김부희, 사무관 윤혜영 (044-202-7682, 7684)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과장 강주엽, 서기관 최아름 (044-201-3201, 31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조지호, 경정 최인규 (02-3150-2002, 2702)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조선호, 소방정 이영팔 (044-205-7210, 7211)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서승진, 경정 최경근 (044-205-2018, 2118)

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

- 3일차, 6개 부처(행안·노동·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청) 정부업무보고 -

◆ 부처별 중점과제 ◆

- (행안부)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 (국토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and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
- (경찰청)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개최
- (소방청) 비상 출동원칙의 총력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
- (해경청)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 개 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소방청(청장 조종묵)·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과 함께 1월 23일(화)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사망자 중 안전사고사망자 비중) 12.8% (총 28,218명)/ OECD 평균 6.4%(‘16년)
-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 * (규모 5.0이상 지진) ‘78년 지진관측 이래 발생한 총 10회 중 최근 2년간 4회 집중 발생
-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
-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 ①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②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③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 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8초→1초)*, 전국 단일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고내용 경찰·소방·해경 간 화면 동시표출,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7분→10초)

** ('18년) 중부권 5개 시·도 → ('19년) 남부권 9개 시·도 → ('20년)수도권 3개 시·도

-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셋째,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지역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황식 매뉴얼 작성, 전자(mobile) 매뉴얼 보급 등

- 한편,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행태가 많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교통사고의 56%, 화재의 53%, 승강기사고의 69%가 안전수칙위반으로 발생('15년)

- 이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 행위 제재·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각부처·자자체) 안전기준 미비 또는 형식적 운영시 개선 권고, 이행실태 공개

-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금년중 816개 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확대(1,300여개소)
- 이와 함께, (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고, 국가 안전대진단, 범부처·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를 통해 생활 곳곳의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민, 시민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관찰단 등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 재해 감축’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 김영주 장관은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3 → 2.7명, 사고사망자 969명 → 500명 대
- 우선,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삼성중공업, 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 ‘18.3 결과 발표(공청회) 및 정책권고 → ‘18.下 제도 개선

- 현장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사항에 더하여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하고
 -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속 지도할 계획이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신설·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 (발주자) 건설기획·설계단계부터 노동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책임 신설
(원청)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신설 등

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주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
 - 우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 '22년까지 50%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실시간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 지진에 대비해서는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한다.
 - 건축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피난통로·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 * 필로티 구조,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 교통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 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한국 9.1명 vs OECD 평균 5.6명(35개국 중 31위, '15년)
 - ** 사고다발 지점 개선('18, 63개소) 및 급커브·급경사 등 위험구간 도로구조 개선('18, 50개소)
-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경찰청)과 함께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와 마을 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 * 차로 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 유도 시설
 - ** 비도시부 마을에 주민 보호구간(전후100m)을 지정,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 버스·화물차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좌회전 대기차량을 감지해 대기시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 확대('17년 164→'18년 239개소)

4 경찰청

- 이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적용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30km/h로 하향 지정
 -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 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 △차량정체(80km/h 미만)시 추월차로 주행 허용 △차로별 구분 단순화(대형차량 우측 주행)
- 이어진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총 1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회기간 중에 총기·화약류 사용이 제한*되고,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올림픽 기간 내 수렵총기 출고 전면금지

5 소방청

-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차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
 - 현장 부족인력(1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 또한,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 취약 지역에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6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시배 사고('17.12.)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낚시어선 사고 : '15년)206건 → '16년)208건 → '17년)263건
-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통합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內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청취

-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평 】

-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고·참여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므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등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 개요, 주요 추진과제 설명자료 등. 끝.

'18년도 연두업무보고 재난·재해 대응분야 브리핑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참고1

행사개요 (행안부)

□ 개요

- (주제) 국민안전 - 재난·재해 대응
- (일시) 2018. 1. 23(화), 10:00~12:00(2h)
- (보고기관)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청
- (장소) 세종 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참석 : 약 150명

- (국회) 당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
- (청와대·국조실) 수석, 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
- (보고·참여기관) 행안부·노동부·국토부 장·차관,
경찰·소방·해경청장 등

* 참여기관 : 복지·과기·농식품·해수·환경부, 식약처, 산림청, 원안위

- (민간 등)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장 등

□ 행사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2:00	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2', 10:00~10:02)	* 사회 : 행안부 기초실장
	② 총리 모두말씀(5', 10:02~10:07)	* 기자단 퇴장(3분)
	③ 업무 보고(45', 10:10~10:55)	* 보고기관 장관, 청장
	④ 자유 토론(60', 10:55~11:55)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진행
	⑤ 총리 마무리 말씀(5', 11:55~12:00)	
	⑥ 퇴장(12:00)	

참고2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행안부)

- ◇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대응 지원 및 기존 노후 통신망 교체 등을 위하여 '20년까지 전국 단일 PS-LTE망* 구축
- *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 표준)

□ 추진방안

- (사업계획 수립)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기재부(KDI) 검토를 협의 완료 (11.30.)하였으며, 총사업비 확정 및 본 사업계획 수립(1월말)

< 본 사업 계획(안) >

- ◆ (사업기간) '18 ~ '20년(3년간)
- ◆ (총사업비) 17,025억원(KDI 검토)
- ◆ (사업규모) 운영센터 2개소, 기지국 15,447식, 단말기 24만대 보급 등

준비단계 (*14~15년)	시범 / 보강 사업 (*15~'17년)	본 사업		
		1단계(*18년)	2단계(*19년)	3단계(*20년)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	평창 동계 올림픽 지역 평창, 강릉, 정선	중부권 5개 시도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남부권 9개 시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 (본 사업 추진1단계) 중부권 5개 시·도 지역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구축 (기지국 4,318개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2운영센터 신축
- ※ <사업비> 1,218억원(구축 1,171억, 운영 47억) / <사업기간> '18. 4 ~ 12월(9개월)
- ※ 다수 사업자 참여와 건전한 경쟁구도 유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발주

□ 기대효과

- (통합대응능력 제고) 재난망은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지원
- (노후 통신망 교체)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경제적 유지·보수 가능
- (산업육성) 철도망·해상망과 연동,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을 구축,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 및 산업·경제적 효과 창출

- ◇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 추진 방안

① 안전교육 확대 및 생애주기별(영유아~노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학생·안전종사자 중심에서 6대분야* 전 국민 대상 확대
*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
- (추진기반)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25개 부처 및 지자체)
*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
- (인프라) 콘텐츠 개발('17년 371개→'22년 988개), 전문인력 양성(매년 2천명), 안전교육기관 지정·육성(매년 20개), 교육포털 구축·운영

② 체험 중심의 국민 안전교육 확대

- (체험관) 155개에서 '22년까지 177개로 확충(행안부 8, 교육11 해수2, 국토1)
- (체험교육) 체험관 및 이동형 체험교육을 통해 체험교육 확대
* 매년 20%씩 확대('17년 289만명 → '18년 346만명 → '22년 703만명)

③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17개 지역 4천명)

④ 국민 중심의 안전실천 운동 전개

-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업, 생활 속 안전 실천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정부·지자체·시민단체·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정립
- (국민) 안전점검 및 신고 활성화 (정부) 단속·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 18.1월~)

참고4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국토부)

◇ 건설사업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 근절 및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발주자) 건설계획·설계·시공 등 각 사업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 책임 미이행 시 제재 신설

-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장 책임성 강화

- 건설기계 임대계약(원청⇔임대업체)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의무화

○ (원청) 불법 하도급 계약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불이익** 부여

* 例) 150만원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영업정지·과징금

** 중대재해 벌점 신설(벌점 누적 시 PQ 감점·입찰 제한), 안전 관련 영업정지 부과 or 일정 수준 이상 벌점 업체에 대한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 (설비안전 강화)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20년 이상 크레인 등 수입 제한)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 정기검사 (설치시 & 설치 후 매 6개월 단위)	· 6개월마다 특정 부품 안전검사 의무	·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의무	· 원칙적 사용제한+ 예외적 연장허용 · 노후크레인 수입 제한

○ (임대업체 책임 강화)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1회),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2회) 조치

○ (작업자 자격관리 강화)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

◇ 화물,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지원

○ 장착비용 : 대당 50만원

○ 지원금액 : 국비 40%(20만원), 지방비 40%(20만원), 자부담 20%(10만원)

○ 지원대상 :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버스(9m이상), 화물·특수(20톤 초과)

○ 지원기간 : '18. 3~'19. 12

* 보조금지원지침 마련중으로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3월중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기능이 포함된 성능인증시험을 통과한 기기에 대해 지원

○ 지원 대수 : 승합 25,000대, 화물 50,000대 등 총 75,000대

* (전체 사업용 차량) 승합 : 126,342대, 화물·특수자동차 : 450,023대

□ 전방충돌제어장치(AEBS) 장착 지원

○ 장착비용 : 대당 500만원

○ 지원금액 : 국비 25%(125만원), 지방비 25%(125만원), 자부담 50%(250만원)

○ 지원대상 : AEBS 장착 신규 차량으로 대체차 하는 노선버스

○ 지원기간 : '18~'22년도

○ 지원 대수 : 광역 2,020대, 시외 4,160대, 고속 9,400대 등 총 7,3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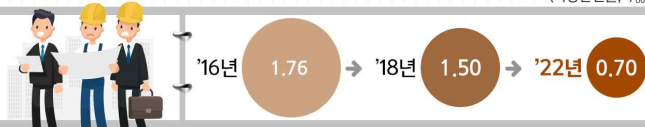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건설안전

(사망만인율, 0/1,000)

건설현장 사망만인율 **50%** 이하로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명 중 산재 사망자수



발주자·원청 책임강화



- ▶ 단계별 발주자의 책임명시, 미이행시 제재
- ▶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하청 동시 처벌

안전관리제도 이행점검 강화



- ▶ 건설안전 전담조직 신설
- ▶ 안전 종합정보망구축('20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진단

- ▶ 허위연식 전수조사
- ▶ 안전사고 2진 아웃제 (1회 영업정지, 2회 아웃)



첨단기술 적용

- ▶ 건설자동화 R&D
- ▶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18년)



>> 지진·화재 안전

SOC

- ▶ 국토교통 SOC 내진보강 완료('19년)



건축물

- ▶ 전수조사 및 보강 촉진

전수조사	정보공유	단계적 보강
가연성 외장재 내진설계 적용	소방관서 지자체·소유주	인센티브 강화 보강의무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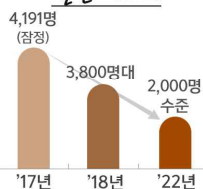
필로티

- ▶ 화재·내진 안전기준 강화



>> 교통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이하로



보행자 중심 속도관리 체계

- ▶ 마을인근도로 보호구간 확대
- ▶ 차량 속도저감 유도시설 설치 (차루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취약부문 개선

- ▶ 사고다발지점 개선
- ▶ 위험구간 도로개선
- ▶ 화물차량 관리강화

첨단기술 활용

- ▶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LDWS, AEB 등)
- ▶ 교통신호 개선사업
- ▶ 빅데이터활용 도로위험평가



참고6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방안 (경찰청)

□ 대회기간 경력운용 계획

- 소요경력 : 총 13,309명 (경찰관 6,858명, 의경 6,451명)
- 단계별 경력운용 : 1단계 - 1.25. ⇨ 2단계 - 2.1 ⇨ 3단계 - 2.8.
- 경력배치 : 연 283,000여명 / 일일평균 8,000여명

□ 대회시설 안전 확보

- 현장종합상황실 운영, 종합적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 경기장·교통 CCTV, 헬기 촬영 영상 등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대회시설(13개소) 및 지원시설(8개소) 대상, 3중 책임경비 실시
 - △1선 : 시설내부 △2선 : 안전펜스 내부 △3선 : 안전펜스 외곽

□ 빈틈없는 테러 대응태세 구축

- 취약요소별 안전조치 강화
 - 대회기간 총기·화약류 사용제한 및 수렵총기 출고 금지
 - 조직위와 합동 테러 취약지 시설개선 및 장애물 보강
 - 테러취약시설 점검, 시설 종사자 대테러 교육
- 주요시설 경찰특공대 전진 배치 즉응태세 구축
 - 대회시설별 경찰특공대 및 테러차단장비 배치
- 참가국 경찰관 초청 국제경찰협력센터 운영
 - 참가국 테러 관련 위험인물 정보 공유, 입국제한 조치
 - 참가국 방문객 보호활동 전개

□ 북한 참가단 전담 대책반 운영

- 통일부·조직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전담 신변보호대 운영 등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

-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 현상 발생 및 소극적 대처로 현장활동 지연 발생

□ 강제처분 등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강제처분) 및 제4항(손실보상)

《 소방기본법 제25조 》

- ▶ (강제처분)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 (손실보상)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실 태

-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 강제처분에 따른 책임소재, 요건 부재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처
- 손실보상 구체적 절차규정 미비 → 소방기본법 개정(공포 12.26, 시행 '18.6.27)
 -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운영 9개* 시도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 집행력 제고방안

- 손실보상 세부규정(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 마련('18.6.27 시행)
 - * (시행령 규정내용) ①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②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운영, ③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
- 강제처분 요령 등 지침(매뉴얼) 마련을 통한 적극 조치
 - 법령위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확행
 -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및 공익법무관 배치 추진(법무부 협의)
 -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조치(지자체<견인업체> 협약)
- 소방차 출동 및 활동여건 개선
 - 불법 주차금지구역 확대 및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도교통법령 개정)
 - *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 소방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 요청 지정 등, 과태료 2배 부과
 - 소방차 전용구역 법제화(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기숙사 등, 소방기본법령 개정)
 - *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조치(지자체<견인업체> 협업)

참고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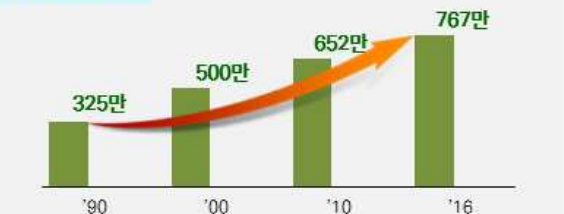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해양경찰청)

- ◇ 낚시인구 700만 돌파, 낚시배 및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도 지속 증가 추세
 - * ('14년) 4,381척/246만명 → ('15년) 4,289척/281만명 → ('16년) 4,500척/342만명
- 해양사고는 초기 상황 파악과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및 VTS 관제구역 확대
 - *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통합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內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청취
-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 지정·운영 등

□ 연안 체험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제 정착으로 낚시인구 700만 돌파

낚시인구 추이



- > 낚시어선 신고 척수(4,500척)와 낚시이용객(342만명) 증가 추세

낚시어선 신고척수,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



□ 해양사고 추세와 경향

- > 선박 노후화 및 선원 고령화 등으로 해양사고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해양사고 현황



- > 사고 대다수는 어선*이 차지하나 최근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의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

* 3년 평균 선종별 사고 현황

어선(55%) > 레저(19%) > 낚시어선(8%)

** '16년 대비 '17년 선종별 사고 증가율

낚시어선(28%↑) > 레저(25%↑) > 어선(9%↑)

□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 >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의 **지방청 통합 운영**
- 숙련된 신고 접수 전담자 60명을 5개 지방청 배치
- > 관계기관(소방·경찰) 협조 강화
- 119·112 경유한 해양사고 신고전화 → 즉시 연결
- > VTS 및 상황실 간 신고내용 **공청 시스템 구축**
- 지방청 ↔ 해경서 간 공동 청취, 상황실 내 전 직원 정보공유
- VTS ↔ 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 구조역량 강화



□ 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

- > **출동시간 목표제** 구조세력별 출동지령 접수부터 출동시까지 **최단시간 설정·단축**
* 이동용 구조보트, 특수차량 등은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두고, 민간선박 등 대체선박 확보
- > **도착시간 관리제** 구조세력의 출동시부터 현장 도착시까지 시간을 지속 관리하며 단축



- > 구조보트 등을 즉시 출동 가능 위치에 계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용 계류시설 확충**

